

“국민연금·부동산 넘어 사적연금 등으로 미래 대비해야”

축사

김 주 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대독

“100세시대 가장 큰 고민거리 ‘노후’ 부동산 연계 부채 불안요소 꼽혀 연금·투자상품 확대 인프라 만들 것”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과 금융자산 등을 통해 노후 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포럼’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당연한 노후 대비일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저한 노후 준

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족한 현황으로 불안한 부분이 많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높은 국민연금 의존도와 부동산 쏠림,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1년 노후 준비 방법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응답률이 약 60%인 반면 사적 연금의 응답률은 10분의 1 수준인 6%에 불과하다.

또한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60%가 넘고 비금융자산의 90% 이상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쏠림 현상이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 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도 관심이 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과 정부와 금융위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소

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적연금과 금융자산 등을 통해 노후 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국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금 및 금융투자 상품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3종 연금 체제를 통해 노후 대비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펀드에 고정 방식 투자 대상을 확대했고,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 역시 (노후준비 관련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예비 파트너로서 금융상품 설계에 명품 대상 운동 등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불확실성, 도약의 계기로 삼는 지혜 필요” “건강상태·수익 등 고려 국민연금 개시를”

개회사

이 장 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엄지 린, 불확실성 극한으로 몰아 금융당국의 리더십, 빛 발할 순간”

세상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에 이어 우크라이나전쟁, 미·중 갈등은 지구촌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폭발적인 금리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가져온 후폭풍은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까지 집어 삼켰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갈지, 행여 15년전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로까지 확산되는 건 아닌지 금융당국, 금융회사,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가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 하고 있다. / 손진영 기자

같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빼는 ‘뱅크 런’ 대신 모바일뱅킹으로 즉각 대량인출하는 ‘엄지 린’은 불확실성의 속도를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파급력과 파급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앞선 두 금융선진국, 미국과 스위스에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정말 그러하길 바랍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순간이고, 투자자들은 부하노동 하지 않고 차분히 사태를 파악해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불확실성의 껍질을 벗겨내고 위기의 내면을 맛따드리면 나아갈 길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하늘의 연은 더 높이 뜬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와 불확실성을 도약의 계기로, 체질강화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명한 강사님들의 진단과 분석, 전망을 바탕으로, 이번 포럼이 불확실성의 공포를 이겨내고, 새로운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1면 ‘실물자산—금융자산’서 계속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오는 2024년 5월 까지 유예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더했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에 주택을 팔아야 절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여시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방식도 소개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포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전세를 끼고 증여하면,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 만큼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증여금액은 클수록 세금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어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김동업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본부장은 국민연금 개시시기와 관련해 “자신의 건강상태, 수익률, 예상수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63세에 수령할 수 있지만, 앞당겨 58세에 받을 수 있고, 늦춰 68세에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수령시기를 앞당길 경우 연금은 1년당 6%씩 감소하고, 늦출 경우 7.2% 증가한다.

김 본부장은 “이외에도 주택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美 베이비스텝에… 한은, 금리 추가인상 압박 줄어

미국 기준금리 5.0%로 뛰어 파월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4.50~4.75%에서 4.75~5.0%로 뛰었다.

다만 연준은 이날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 값을 5.1% 유지해 사실상 5월 예정된 다음회의에서 베이비스텝을 단행한 후 금리인상이 종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에 무게를 두되 실리콘밸리은행(SVB)

B) 사태 이후 확산되는 은행 위기 여파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행 위기여파를 고려해 동결할 생각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동결도 고려했다”면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목표치(2%대)로 낮추는 것으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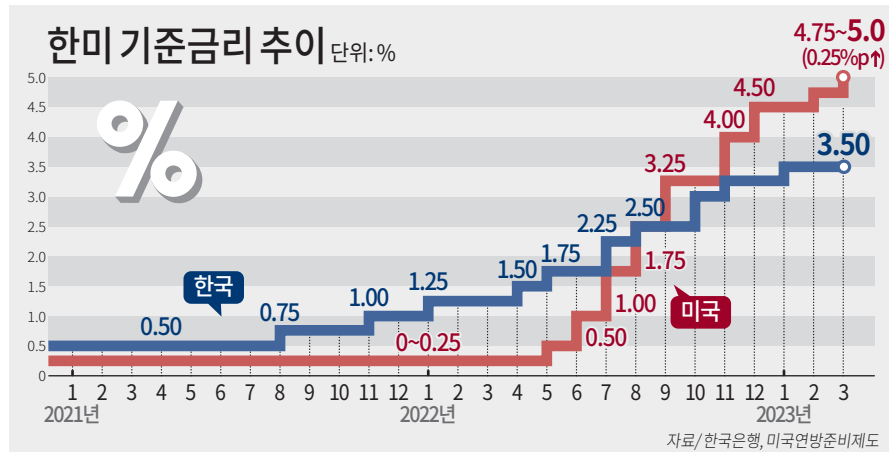
파월 의장은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며 “올해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한 신용 여건과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지켜본 뒤 금리인상이나 동결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 인상 경로를 각자 ‘점’을 찍어 보여주는 점도표에 따르면 중간 값은 5.1% (5.0~5.25%)로 기존 전망과 같았다. 베이비스텝이 한 번 정도 남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여파를 지켜볼 여유가 주어졌다. 한국은행은 오는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로 1년 전과 비교해 4.8%



상승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5%대 물가가 4%대에 진입한 것이다.

또 지난 2월 유출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은 5억2000만 달러(6878억원)로 한달 전(52억9000만달러)과 비교해 크게 줄었

다.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졌음에도 자본 유출조짐이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4월 한국은행이 동결을 결정하고, 연준이 한차례 금리를 0.25%p 인상하면 한미 금리격차는 1.75%p로 커진다.

/나유리 기자